

2017년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와 아베 정권의 정체성 분석: 자민당 압승과 야당 세력 부재의 원인을 중심으로*

김용민**

| 목 차 |

I. 서론	IV. 총선 결과와 야당 패배의 원인
II. 선행연구의 정리와 분석	분석
III. 2017년 중의원 선거의 정당 공약 비교	V. 결론

| 논문요약 |

이 논문은 2017년 10월 22일 실시된 제48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를 통하여 장기집권으로 돌입하고 있는 자민당 아베 정권의 정체성과 선거 승리 원인을 분석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이 선거에서 자민당은 압승을 거두었으며 이는 야당 세력이 부재한 데 원인이 큰데 일본 야당의 분열 원인과 아베 장기 정권의 정책 파악을 통해 정권의 향방을 전망한다. 우선 중의원 선거의 커다란 쟁점으로 헌법 개정, 경제 문제, 북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중요 쟁점들에 대하여 각 정당들이 어떠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유권자들이 자민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 안정 의식을 확보한 자민·공명 연합여당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지를 아베 정권의 정체성 파악과 공약의 진행 상황을 분석하여 예측한다. 2017년 중의원 선거 압승 이후에 아베 정권의 이어지는 내부 스캔들과 급변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를 반영하여 앞으로 일본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을 모색한다.

▪ 주제어 : 일본 총선, 아베 정권, 헌법 개정, 아베노믹스, 북한 핵 개발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 건국대학교 KU중국연구원 조교수.

I. 서론

2017년 10월 22일 아베 일본 총리의 임기 아래에 3번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아베 총리가 국난극복선거라고 선언한 조기 해산에 이은 중의원 선거는 야당으로부터 스캔들 회피 선거 등으로 비판받고 모리토모, 가케이 문제와 같은 연이은 스캔들로 지지율이 30% 이하로 추락했던 아베 총리가 북한 핵 위기를 바탕으로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 기습적으로 임시국회 개회일에 해산 총선거를 감행함으로써 야당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정치적인 음모 선거라는 비판마저 들었다. 특히 도쿄도 지방선거에서 도민 퍼스트회를 결집하여 압승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도지사가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어 야당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아베 정권 위기론마저 등장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자민당-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여당이 개헌 가능한 3분의 2선까지 압승하며 결국 아베 총리의 사상 최초의 자민당 총재 3기 연임과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의 총리직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헌법 9조로 대표되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산술적으로는 시작될 기반이 마련되었다. 실제로 자민당 개헌 세력들은 아베 총리에 대한 신임이 확인되었다며 개헌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며 영국식 안정적 양대 정당 체제를 목표로 하였던 일본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민당에 대항하는 야당 세력이 분열하여 이번 선거의 결과로 제1야당과 자민당의 의석수의 차이는 예전 중선거구제 시점과도 비슷한 의석분포를 보인다. 도민퍼스트회로 대표되던 지방선거에서의 지역정당의 돌풍은 희망의 당의 패배로 인해 사라졌다. 이는 이전의 오사카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오사카 유신의회의 열풍이 지방선거에서만 작용하고 전국 규모 총선거에서는 발휘되지 못하였던 사실과 유사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양대 정당제의 실패와 지역중심 정당의 정치 세력화의 한계, 그리고 아베 정권에 대한 대안 세력 부재의 원인에 대해 논의해 보려 한다. 서론에 이어지는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II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일본의 선거

(중의원, 참의원, 지방선거) 등을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정리,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이번 선거에 참가한 각 정당들의 선거공약 비교와 분석을 통해서 이번 선거의 쟁점이 어떤 주제였는가를 밝히고, 자민당의 승인은 어디에 있었나를 고찰한다. IV장에서는 실제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소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양대 정당제로 진행하지 않는 이유와 이념의 스펙트럼이 다른 정당들의 이념 대결이 일본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정당들이 왜 지방선거에서는 선전하면서 총선과 같은 전국 규모 선거에서는 고전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베 자민당에 대한 대안 세력인 야당 세력은 왜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앞으로 아베 정권의 정치, 경제, 외교정책의 성향을 예측해 보는 작업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앞으로의 아베 정권으로 대표되는 자민당과 한-일 관계를 예측하여 본다.

II. 선행연구의 정리와 분석

일본 중의원선거라는 주제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먼저 선거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이이범(2013; 2014)의 연구는 총선의 결과와 시사점 및 참의원 선거를 분석하였고, 이지영(2016)은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연결하여 고찰하였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2013년부터 개방된 인터넷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추거나(岡本哲和 et al. 2015), 2016년부터 인정된 만 18세 선거권의 영향을 분석하거나(土倉莞爾 2016), 중의원과 참의원 두 의회의 차이를 살피는 연구(大西祥世 2014),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의식배분과 선거구 설정에 대한 연구(市村充章 2014),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인 트위터의 선거이용을 살펴본 연구(吉見憲二 2016) 등을 진행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큰 흐름으로는 선거가 아닌 정당체계와 정당론에 중심을 둔 연구들인데, 2013년 참의원선거와 정당체계를 분석한 연구(고선규 2013)가 있고, 한의석(2014; 2016; 2017)은 도쿄도지사 선거, 혹은 제3정당의 대두 문제, 일본 정당정치의 변화 등의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 특유의 지역기반 정치가에 주목한 연구(박명희 2015), 선거에서의 자민당-공명당 선거연합을 다룬 연구(김용복 2015)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당파의 성향을 살펴본 연구(김용복 2016; 이이범 2016)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와 같은 직접적인 요소가 아닌 간접적인 선거연구로는 일본 정치 보수화를 살펴본 박철휘(2014)의 연구나 일본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증세 없는 복지에서의 실패를 살펴본 연구(권순미 2015), 일본 민주당이 목표로 하였던 일본 정치 안에서의 양당제 구축시도(村上 弘 2012),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총선거와의 관계(杉山幸一 2016),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의 중간 평가적 의미를 가지는 선거 결과를 고찰한 연구(岡部光明 2015)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 일어난 야당 세력의 분열이나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정당의 국정 규모 선거에서의 부진, 혹은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 원인 분석 등은 아직 국내에서 심도 있게 분석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4기에 들어선 아베 내각의 장기집권이 어떠한 원인으로 지속되고 있고 소선거구제 도입 시점에 예상되던 자민당과 민주당의 양당제 예상이 완전히 무너진 현재 일본의 정당체계는 왜 소선거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다당제 분산된 형태를 보이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지지율이 특별히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선거에서는 매번 승리하며 장기 안정 정권을 확립한 아베 자민당의 승리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장기집권이 과연 정치적인 공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 특유의 정치문화나 정당 체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이슈들에 편승하여 매번 선거의 시점을 잘 잡는 정치적 감각에 의한 것인지 이 논문에서 규명하여 아베 장기집권의 요인을 밝히는 것을 이 논문의 연구 목표의 하나로 한다. 특히 이러한 장기집권의 요인을 본 논문에서는 양대 정당제 구축 실패와 지역중심 정당의 전국정당화 실패로 가정하고 이러한 이유들이 타당한가를 규명한다. 이를 통하여 아베 정권 장기집권의 요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아베 자민당 정권에 대한 한국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함을 부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구체적인 논문의 방

법론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헌법 개정 문제, 경제 문제,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각각의 정당의 공약을 비교분석하여 선거 결과와의 연관성을 규명한다. 이러한 쟁점들은 헌법 9조 개정이 일본의 재무장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과 경제 문제가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는 점, 그리고 북핵과 미사일 실험 문제가 실제로 일본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최선의 국제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에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이번 선거에 참가한 각 정당들의 선거공약 비교와 분석을 통해서 이번 선거의 쟁점이 어떤 주제였는가를 밝히고 자민당의 승인을 분석하려 한다. 특히 사상 제일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중의원 선거가 과연 일본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도 부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I. 2017년 중의원 선거의 정당 공약 비교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 이번 선거의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이번 선거가 정치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한 시점의 아베 총리가 북한 핵 개발 혹은 미사일 발사로 불어온 북풍을 이용하여 야당의 전열이 정비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총선거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은 ‘국난극복선거’, 야당은 ‘스캔들 도망선거’라고 명명하는 등의 선거의 의미에 있어서 극단적인 대립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배경과 태풍 속에서 치러진 악천후의 선거일로 투표율이 사상 두 번째로 낮았다고 하여서 전혀 정당들 사이의 차이점이 없는 단순한 이미지에 의한 선거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 중의원 선거의 특징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중의원 선거의 공약비교는 더욱 중요한데, 외부적 이미지와는 다른 실제의 선거 결과와 공약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요한 선거공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각 정당의 공약들을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총 9개 정당(자민당, 희망의 당, 공명당, 공산당, 일본 유신의 회, 입

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일본의 마음당, 행복실현당 - 순서는 선거 시점의 의석순)의 공약을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헌법 개정 문제이며, 두 번째가 경제 문제(재정, 사회보장, 소비세),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 문제이다. 기타 이슈로는 재해 부흥, 지방자치, 교육무상화, TPP 협정에 있어서의 농림수산업의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즉 이미지와 매스미디어의 보도와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공약들이 비교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총선거의 공약을 자세히 비교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총선에 도전한 9개 주요 정당의 공약을 각 주제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중요성을 분석하고, 이어지는 IV장의 선거구별 양적 분석과 종합하여 어떠한 이슈가 제일 선거 결과와 직결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면 각 주제별로 각 정당의 공약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 개정 문제

우선 적극적인 개헌을 추진한 정당들이 자민당, 희망의 당, 일본 유신의 회, 일본의 마음당, 행복실현당 등이며 명백하게 개헌에 반대한 당들이 공산당, 입헌민주당, 사회당 그리고 조건부 개헌의 가능성을 언급한 정당이 집권 연정의 파트너인 공명당이다. 공명당은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헌법 9조 1항, 2항에 대해서는 헌법의 평화주의를 대표하는 조항으로 앞으로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도 이외의 조항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개헌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하게 각 정당별 공약을 살펴보면, 자민당은 공약집에서 국민의 넓은 이해를 얻어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확실히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자위대의 헌법 명기, 무상교육 도입, 긴급사태 대응, 참의원의 선거구 개정 등 네 가지를 주요 헌법 개정 목표로 들고 있다(自民黨 2017, 18).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19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정책 은행 서술 부분에는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았고, 공약의 순서도 마지막 여섯 번째에 배치하는 구조로 첫 번째인 북한 문제와 두 번째 경제정책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의 승리를 획득하여 자연스러운 헌법 개정 세력의 의석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 임했음을 알려 주는 증거이다. 역설적으로 개헌 세력을 확대하지 않으면 현재 일본 사회에서 개헌이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개헌 찬성 진영이었던 희망의 당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9페이지에 여덟 번째 공약으로 헌법 개정 문제를 들고 있는데, 시대에 맞추어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며 지방자치의 분권의 개념도 헌법에 명기하여 체제자주권, 재정자주권을 규정하는 데 주목적을 두며 이 모두를 포함한 헌법 전체의 재검토를 여야당 협력을 통해 진행해 나간다고 천명하고 있다(希望の黨 2017, 9). 이는 헌법 개정이라는 보수정당으로서의 색깔을 천명하면서도 스캔들로 위기에 처한 아베 자민당을 정보공개라는 수단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개헌 지지 세력인 일본 유신의 회의 공약집은 또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세우는 공약부터 현실적인 헌법 개정으로 교육무상화, 정치기구개혁, 헌법재판소의 설치로 자위대의 명시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日本維新會 2017, 4).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개헌 세력이라고 하는 일본의 정치집단에도 헌법 개정의 정도에 따라 많은 스펙트럼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보수진영조차도 이를 가장 큰 주요 공약으로 들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즉 아베 2기 내각이 헌법 9조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들 사이에 아직 공감대가 충분히 확대되어 있지 않고 호헌파의 세력도 일정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거나 간접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대표적 개헌 반대 세력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입헌민주당은 당명에서 알 수 있듯 입헌주의 회복을 내세우며 안보법제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형태의 헌법 9조의 개악에도 반대하며 영역경비법 제정과 헌법의 운용의 묘를 통해 충분히 지금의 평화헌법을 유지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立憲民主黨 2017, 4). 한편 공산당은 일본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답게 호헌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약집을 통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어떠한 형태의 헌법 9조 개악에도 반대하며 평화헌법을 기초로 하는 평화적 외교를 확립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共産黨 2017, 11). 이를 종합해 보면 이어지는 IV장에서 종합적으로 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고찰하겠지만 헌법 개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면서도 표면적으로 아직 노골적으로 이를 선거 이슈로 삼지 않는 개헌 세력과 그 숨어진 의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호헌 세력이라는 구도로 정리된다.

2. 경제 문제(재정, 사회보장, 소비세)

두 번째 선거의 쟁점이 된 것이 역시 경제 문제, 특히 소비세 10% 인상을 언제 시행하느냐의 문제와 사회보장(아동복지, 유아원 과포화 문제 등)이었다. 경제 문제는 분야별로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어 분야별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경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역시 아베노믹스의 평가 부분이었다. 여당인 자민당은 당연히 아베노믹스를 성공이었다고 평가하며 아베노믹스를 가속시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피하고 경기회복을 확실한 것으로 만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공약집에도 명목 GDP 과거 최고, 기업수익 역대 최고, 청년취업률 과거 최고 등을 업적으로 내세웠다(自民黨 2017, 5). 공약집에서도 북한 문제 다음의 두 번째로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피력하면서 이제 대기업 등의 경제적 회복을 실제 생활의 실질소득과 연계시킬 시기임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에 비하여 희망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아베노믹스가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켰고 실질임금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일부 대기업의 수익만 증가시켰음을 지적하며 강한 경제, 재정개혁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는 입헌민주당, 일본유신의회, 공산당, 사회당 등의 모든 야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이에 비하여 희망의당만이 포스트 아베노믹스의 필요성을 공약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성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아베노믹스 아래의 경제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사회보장이나 보육정책에도 이어져 자민당은 아베노믹스 1기의 성공을 바탕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함께 이제 사회보장과 보육 등의 분야로 경제회복의 성과가 이동할 것이므로 아베노믹스 2기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야당들은 아베노믹스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사회보장이나 보육 문제 등은

아베 정권에서 소외되어 왔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거 직전에 있었던 도쿄 시내 보육원 배정불가 스캔들을 각 정당 모두 의식하여 보육정책의 수정을 전반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민당도 2020년까지 32만 명의 아동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앞당겨 집행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을 정도이다. 특히 아동 보육의 문제는 여성의 노동 문제에도 직결되는 관계로 각 정당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로 경제정책 중에 가장 많은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정책이 아닌 단지 예산을 배정하여 현재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추상적인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에서 가장 큰 논쟁이 벌어진 부분이 바로 소비세의 8%에서 10%로의 인상 부분이었다. 자민당은 예정대로 부가세인 소비세의 10% 인상을 주장하며 인상으로 얻어진 추가 세수를 사회보장제도의 충실과 재정건전성 확대에 투입할 것으로 공약하고 있으나, 한편 야당들은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일본 경제상황에 있어서 소비세 10% 인상의 유보 혹은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정책에 있어서 공약을 비교분석해 보면 모든 정당이 공통적으로 아베노믹스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상승과 대기업의 영업실적이 호전되었음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나 야당 세력들은 빈부격차의 확대와 실질임금의 정체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자민당은 아베노믹스의 2단계 시기에 돌입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제 경기호황이 실질임금과 국민들의 실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호전된 경제를 보여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역시 보육정책과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정책의 쟁점이 되었다는 점으로, 이는 희망의 당이 여성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제 문제들은 선거 전의 예상이나 선거 시점의 공약 대결과는 다르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문제

세 번째로 큰 이슈는 북핵 개발과 장거리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실험 발사로 발발한 북한 문제였다. 선거 승리를 위해 아베 총리가 일부러 조

기 의회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하였다고 야당이 비판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위기감이 극에 달한 시점에 행해진 총선거여서 북한에 대한 공약은 각 정당 모두 매우 예민한 공약 대결이 되었다. 먼저 여당인 자민당은 당연히 공약집 제일 앞에 북한 관련 공약을 배치하며 소위 북풍을 몰아갔고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미일동맹의 강화 등을 내세우며 아베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의 친밀함을 어필하는 사진으로 공약집을 구성하였다(自民黨 2017, 3). 특히 공약집 첫 공약으로 배치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움으로써 유권자들의 위기 의식을 극도로 자극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국면 일수록 국정경험 풍부한 안정된 정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고 있다. 이에 비해 야당의 대북한정책은 어떠한가? 이에 비해 입헌민주당은 헌법에 준한 국가안보 등을 주장하고 있고 희망의 당은 안보법 제정을 통한 대북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유일하게 일본 공산당만이 대화를 통한 북핵의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共産黨 2017, 5-6). 야당들의 공약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제재를 통하여 북핵, 미사일 문제의 극복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민당 중심의 일본관 북풍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들이 고심한 흔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감상으로는 역시 자민당과 아베 수상이 주도한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의 자민당이라는 설정에 야당 세력이 대응에 고심한 것으로 보이며 북핵 위기가 결론적으로 여당인 자민당과 아베 수상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총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은 위에 설명한 세 가지 요인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핵 문제였음이 선거 결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야당이 제시한 헌법 개정이나 경제 문제보다도 일본의 유권자가 북한으로 생긴 위기 상황에 수권정당으로서의 자민당의 안정감에 우위를 두고 투표한 결과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어지는 IV장에서는 구체적인 선거의 결과와 선거 기간 동안의 여론조사의 추이, 그리고 선거 이후의 각 정당과 언론사들의 평가를 통하여 선거를 결정할 주요 사건과 그 이유들을 유추해 본다.

IV. 총선 결과와 야당 패배의 원인 분석

우선 총선거 결과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1>이다.

<표 1> 2017년 일본 중의원 총선거 결과¹⁾

정당명	소선거구 의석	비례대표 의석	합계 의석수	의석수 증감
자유민주당	218	66	284	0
공명당	8	21	29	-6
희망의 당	18	32	50	-7
일본 공산당	1	11	12	-9
일본 유신의 회	3	8	11	-3
입헌민주당	18	37	55	+40
사회당	1	1	2	0
무소속	22	0	22	-22

이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승리와 희망의 당의 선거 전 인기에 비한 부진, 그리고 선거 공고 후 급히 결성된 입헌민주당의 약진 및 제1야당 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가 야당공조를 실시하던 야당 세력 중에서 제1야당이던 민진당이 분열한 시점에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아베 정권이 가장 유리한 시점에 국회를 해산하여 총선거에 들어갔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각 주요 신문사에서 야당 세력이 분열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에 단순히 야당지지표를 합산하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선거 종료 이후에 다수 등장하였다. 우선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7/10/23)에서는 야당이 단일화되었을 경우에 30% 이상의 선거구인 63개 선거구에서 선거 결과가 역전된다고 보도하였고, 『산케이신문』(『産経新聞』

1) 일본선거관리위원회(日本選挙管理委員会 2017) 선거 결과(의석 획득 정당 한정)를 바탕으로 번역함(필자 작성).

2017/10/30)도 야당이 단일화되었을 경우 64개 선거구에서 역전이 일어나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한 연립여당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의 의석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기사를 제시하였다. 한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17/10/24)은 이보다도 더 과격적으로 야당 단일화의 경우 84개 선거구에서의 역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계산이므로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야권의 단일화가 가능하였으면 전혀 다른 선거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예측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민진당이 희망의 당으로 흡수 통합되고 그에 반발하는 의원들은 급히 입헌민주당을 창당함으로써 야당은 제대로 된 연합이나 단일화를 논의조차 못하는 환경이었다. 또한 제1야당을 흡수한 희망의 당도 선거전 내내 스캔들과 통합된 의원들의 분열로 득표를 하지 못하고 2018년 현재는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 전 급조된 입헌민주당이 약진함에 따라 반 자민, 반 아베의 유권자가 일정 부분 존재함은 확실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거전 중에 희망의 당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진보적인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에 의해 급히 창당한 정당이 55석으로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야당 세력의 의석수가 130석 수준이라는 점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우세는 완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016년 참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의 분열, 급조된 야당이 자민당 승리에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러면 우선 이 선거 결과를 통해 아베 3기정권은 어떠한 정책을 펼쳐갈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를 분야별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 개정 문제

표면적으로는 헌법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선에 연립여당이 도달하였다. 압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 9조 개정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연립여당의 파트너인 공명당이 기본적으로 헌법 9조 1항과 2항은 개정 불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를 돌파하거나 보수적인 헌법 개정 세

력이 3분의 2를 넘어야 하는데 그 어느 쪽도 이번 선거 결과로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아베 정권이 총선거 이후에도 모리토모, 가케이 등의 스캔들이 이어지고 있어 헌법 개정의 논의를 시작할 환경이 아니다. 오히려 자민당 내부에서 아베 수상의 총재 해임과 신총재 선출을 요구하는 분위기로써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헌법 개정의 논의는 완전히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이러한 헌법 9조 개정 문제는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잠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자민당 보수파의 정치 목표로 변화할 가능성이 많다. 만약 아베 수상이 물러나고 차기, 혹은 차차기의 구도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자민당 내부에도 헌법 개정에 대해 여러 파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유보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북한을 비롯한 일본의 대외환경이 위협이 증가되는 상황에 의한 요인이 컸기 때문에 북한과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급속도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이 지속된다면 일본의 헌법 개정은 명분을 얻기 어려워 진행되기 힘들다.

2. 경제 문제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경기를 회복시키고 대기업들의 실적을 호전시켰다는 데에는 일본의 정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자민당은 이러한 경기회복이 대기업 중심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매년 실질임금 3% 상승을 목표로 하면서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상승과 소득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들은 아베노믹스가 오히려 대기업만의 이익을 대변하여 부익부 빈익빈을 불러와 일본 사회에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주식시장의 이익이 실제 서민들의 생활의 개선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고 비판하며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된 10%로의 소비세 인상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아베노믹스가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연립여당의 주장을 일본 국민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베노믹스를 비롯한 경제 문제는 이번 선거

에 있어서 쟁점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다. 양쪽의 주장을 소개하면 아베노믹스에 호의적인 진영에서는 아직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중간과정이며 그에 관한 여러 가지 노동정책 개혁이나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자민당이 2015년부터 정책을 수행해 왔던 관계로 더 단기적으로 중요한 북한 핵 개발 문제나 동북아시아의 위기관리 문제가 더 중심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고용지표가 호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의 중간과정임을 감안하면 60점 이상이라는 것이다.²⁾ 물론 이와는 반대로 아베노믹스는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실제 일반 급여노동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지만, 단지 선거의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그 이유를 일본 정치체도의 편향성에 있다고 본다. 즉 급여노동자가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진보정당들이 대기업의 대규모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고 있어 대기업의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완화정책이나 엔저에 대한 정책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³⁾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감안해 보면 아베노믹스와 경제 문제는 소비세 인상을 포함하여 이번 선거에서는 평가가 보류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 경기 호전에 따른 고용증가, 취업률 상승, 주식 시장 활황, 올림픽으로 인한 내수 활성화 부양정책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민당 지지가 있었다는 점은 정책적인 효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북한 문제

선거 결과로 보면 국난극복선거라고 명명하고 북한의 위기를 바탕으로 지지율이 회복되는 시점에 기습적으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한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야당이 분열하고 입헌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공시일에 임박하여 창당선언을 하여 제대로 된 당사와 공약집조차 마련되지 않아 유인물로 대체하는 상

2) 唐鎌大輔, “アベノミクスの評価は「60点以上」。5年間を総点検<衆院選2017>,” <https://www.houdoukyoku.jp/posts/20225>. (2018年 5月 16日 検索)

3) 野口悠紀雄, “働く人を貧しくしたアベノミクスが総選挙で争われない理由,” <http://diamond.jp/articles/-/145356>. (2018年 5月 16日 検索)

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북한 핵 개발과 장거리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본의 위기감은 한반도에 있는 한국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며 이러한 가운데 갑자기 치러진 선거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에 더하여 대화로 인한 해결을 주장하는 야당 측에 있어서도 실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이나 미국, 중국과 같이 직접적인 북한과의 협상이 힘든 일본의 외교 상황에서 유엔이나 국제 재제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 선거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이슈로 하여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시킨 자민당과 아베 정권은 일본판 북풍의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나타난 지방선거에서 강세를 보였던 정당의 중앙선거에서의 약세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음에도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의 성향을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을 볼 수 있다. 역시 국정을 좌우하는 중의원 선거에서는 정당의 수권능력이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 수상으로 대표되는 자민당이 국내에서는 극우의 성향을 띤 보수파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자민당은 보수라는 커다란 이름의 정파 집합체이며 자민당 안에도 극우부터 중도 온건 보수 정치인까지 여러 계파가 보수 대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에 창당 작업도 안된 상태의 희망의 당이나 입헌민주당에 비해 탁월한 수권능력을 오랜 일본 정치사에서 입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소선거구제의 기본적인 전제는 단일화된 여당과 야당의 대결을 의미하는데(영국의 보수당, 노동당이나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이번 총선거에 있어서 여당인 자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파벌의 이해를 초월하여 아베 내각 아래에 단합하여 연립여당인 공명당과도 후보단일화를 시행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한 반면, 야당은 삼분오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소선거구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또한 이번 선거처럼 기습형 해산 총선거는 포폴리즘적 선거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여당과 야당의 공약을 비교하고 대결하는 정책 대결이라기보다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슬로건 대결의 선

거 양상으로 시종일관 선거가 진행되었고, 검증이 되지 않은 무책임한 인기 공약이 다수 남발되었다는 비판을 언론으로부터 받았다.

세 번째로 일본 정치에 있어서의 중의원 해산권이 수상의 임의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거가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내부에서도 아베 수상의 측근과 그 계파를 제외하고는 선거 실시 직전까지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여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의 준비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야당의 대혼란을 불러왔고 분열된 야당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의 연구나 공약의 준비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였다. 같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나 독일은 이미 수상이 임의로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상의 임의의 국회해산 및 총선거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권리는 앞으로 헌법 개정 문제와 맞물려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지역을 바탕으로 한 지역정당들의 전국화 조직의 부족이다. 대표적인 지역정당인 오사카 지역을 바탕으로 한 일본 유신의 회나 이번 선거에서 도쿄를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이겼던 도민퍼스트를 발전시킨 희망의 당은 지방선거에서 오사카와 도쿄라는 지방의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전국 선거에서는 오히려 약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전국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기반인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전국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수는 없고 전국적 시각을 가진 정책으로 변화하면 이 또한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인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을 가져오게 된다. 특히 일본은 지방 분권의 역사가 매우 길어 지역적 특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모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강하게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기습적인 해산 총선거 돌입과 직전의 야당 분열로 2016년과 같은 소선거구 효과가 야당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아베노믹스의 정책적 효과로 인한 청년층의 자민당 지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안보위기의 위기관리 능력에서의 자민당의 우위가 이러한 선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그러면 이러한 선거 결과로 인하여 제4차 내각을 구성하게 된 아베 내각의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한국에 가져다주는 함의는 어떠한 것인가? 우선 일본 국내적인 정책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헌법 개정 문제는 제9조의 개정은 현재로서는 잠복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모리토모, 가케이 스캔들의 문제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 수상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헌법 9조 개정을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하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이에 헌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한 이상 시기를 보아 다시 논의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제2단계로 돌입한 아베노믹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2단계에 목표로 내세운 실질임금 상승, 출산율 증대 등에 기반한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관건은 대기업과 일부 상류층만이 아베노믹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얼마나 제2단계의 목표인 실질소득 상승으로 인한 국내 소비의 증대와 이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디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종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 10%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할 것인가가 주목할 점이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위기감이 증대되던 선거 시점과는 다르게 현재는 남북한의 정상회담에 이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야당이 일본 국내에서 소위 재팬 패싱을 이야기하며 아베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과연 아베 수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강력한 미일 동맹과 개인적인 친밀도를 강조하며 얼마나 북한과의 교섭에 나설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특히 납치 문제를 직접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고선규 (2013). “2013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일본 정당체계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제23권. 제3호, pp. 269-287.
- 권순미 (2015). “일본 민주당 정권의 정책 전환: 증세 없는 복지에서 복지를 위한 증세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4권. 제1호, pp. 37-62.
- 김용복 (2015). “일본의 연합정치와 자민당-공명당 선거연합.” 『다문화사회연구』. 제8권. 제1호, pp. 255-289.
- _____ (2016). “일본 정당정치의 유동성과 무당파-최근 선거 결과의 비교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제2호, pp. 39-68.
- 박명희 (2015). “지역정치가의 대중적 지지 확보를 위한 외교적 실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의 외교이념 변화를 중심으로.” 『日本研究論叢』. 제41호, pp. 85-106.
- 박철희 (2014).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일본비평』. 제10호, pp. 70-97.
- 이이범 (2013). “2012년 일본 총선과 시사점.” 『선거연구』. 제3권. 제1호, pp. 155-169.
- _____ (2014). “일본 참의원 선거의 변화.” 『日本研究論叢』. 제45호, pp. 153-172.
- _____ (2016). “일본 무당파 투표자의 정당선택: 2009년과 2012년 총선 비교.” 『日語日文學研究』. 제96집, pp. 535-555.
- 이지영 (2016).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日本學報』. 제106집, pp. 83-100.
- 한의석 (2014).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와 정책 현황 분석: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日本研究論叢』. 제39호, pp. 187-209.
- _____ (2016). “제3정당의 성공요인: 일본 유신회와 민나노당의 2012년 중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日本研究論叢』. 제43호, pp. 125-147.
- _____ (2017). “일본 정당정치의 변화와 지속: 199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日本研究論叢』. 제45호, pp. 5-31.
- 岡本哲和·石橋章市朗·脇坂徹 (2015). “ネット選挙解禁の効果を検証する—2013年参院選での投票意思決定に対する影響の分析—.” 『關西大學法學論集』. 第64卷. 6号, pp. 1-22
- 岡部光明 (2015). “第2次安倍内閣の經濟政策「アベノミクス」の中間的評価.” 『國際學研究』. 第47号, pp. 81-113.
- 吉見憲二 (2016). “選挙期間中の各政党におけるソーシャルメディアの利用傾向—第

- 47回衆議院議員總選挙のTwitter利用を題材として一.”『社會情報学』. 第4卷. 3号, pp. 15-29.
- 大西祥世 (2014). “両院間の意思の相違と調整.”『立命館法学』. 2号, pp. 1-32.
- 衫山幸一 (2016). “日本における集团的自衛権について-国家の危機管理としての自衛権-.”『八戸学院大学紀要』. 第51号, pp. 37-56.
- 市村充章 (2014). “都道府県議会の議員選挙における選挙区の設定と定数配分.”『白鷗法学』. 第20卷. 2号, pp. 9-54.
- 日本共産黨 (2017). 『日本共産黨 2017 公約輯』. 東京: 日本共産黨.
- 日本選挙管理委員会 (2017). 『日本選挙管理委員会 第48次 衆議院選挙結果』. 東京: 日本選挙管理委員会.
- 日本維新會 (2017). 『日本維新會 2017 公約輯』. 大坂: 日本維新會.
- 立憲民主黨 (2017). 『立憲民主黨 2017 公約輯』. 東京: 立憲民主黨.
- 自由民主黨 (2017). 『自由民主黨 2017 公約輯』. 東京: 自由民主黨.
- 村上 弘 (2012). “民主黨-2012年 衆議院選挙と2大政党制.”『立命館法学』. 5・6号, pp. 783-821.
- 土倉莞爾 (2016). “18歳選挙権について考える.”『關西大學法學論集』, 第65卷. 5号, pp. 1-44.
- 希望の黨 (2017). 『希望の黨 2017 公約輯』. 東京: 希望の黨.

2. 기타

- 田嶋慶彦 石松恒. “野党一本化なら63選挙区で勝敗逆転 得票合算の試算.”『朝日新聞』. 2017年 10月 23日.
- “野党候補一本化なら—84選挙区で逆転可能性.”『毎日新聞』. 2017年 10月 24日.
- “衆院選試算 野党一本化なら64選挙区で逆転勝利 自民、薄氷の勝利.”『産経新聞』. 2017年 10月 30日.
- 唐鎌大輔. “アベノミクスの評価は「60点以上」。5年間を総点検<衆院選2017>.” <https://www.houdoukyoku.jp/posts/20225>. (2018年 5月 16日 検索)
- 野口悠紀雄. “働く人を貧しくしたアベノミクスが総選挙で争われない理由.” <http://diamond.jp/articles/-/145356>. (2018年 5月 16日 検索)

| 논문투고일 : 2018년 05월 17일 |

| 논문심사일 : 2018년 05월 28일 |

| 게재확정일 : 2018년 06월 19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5 No. 2 (2018)

**Japanese General Election 2017 and Identity
Analysis of the Abe Government:
Dominant Win by LDP and Cause of Non-Existing
Opposite Parties**

Yongmin Kim

(KU China Institute, Konkuk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ses the result of Japanese General Election on 22th of October 2017, which made Abe government starts 4th term by dominant win of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research aim of this article is find out identity of Abe government and the reasons of winning in the election.

In this general election Abe and LDP achieved big win and one of main reason of winning is that opposite political parties are almost non-exist in Japanese politics. I will seek the reason of opposite parties split and understanding long-term policies of Abe government to find out the perspective of the Abe administration. In this election they had three main issues in Japanese society, constitutional reform, economic problems and North-Korean nuclear issue. I will compare the policies on these issues of all Japanese political parties and predict what will they do in issues by continuing coalition on ruling party. And aim to answer the Korean counterpart questions to Abe government which very important in Northeast Asian security.

- Keywords: Japanese General Election, Abe Government, Constitutional Reform, Abenomics,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